2024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권리분과 정책제안서

청년 정책 참여 '경청 JO人'

현재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정책 참여에서 실질적인 제안 및 참여를 위한 의견 반영과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청년정책 참여제도를 마련

❑ 제안배경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미래가 될 청년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법과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함

☞ 이에 따라, 우리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참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함

❍ <한겨레>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지난 12월 27~28일 이틀간 실시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 구성에 대해 '지금보다 약간 젊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30.5%, '지금보다 대폭 젊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22.7%로 지금보다 젊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을 넘음

❍ 이는 청년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그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어지며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의 입안권자가 되기 어려우므로 청년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창구가 적을 수밖에 없음

☞ 청년의 날 기념식 대통령축사('23.9.14)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위촉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할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 정부에서도 청년 위원의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참여 정부위원회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음

❍ 실사례로 여성할당제 이후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많아졌고 실제로 여성과 관련한 법과 제도 외에도 여성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들이 다수 반영되어 그동안 성차별을 위해 노력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양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함

☞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와 상통함

❍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 청년들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정부 기조 및 흐름에 맞추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청년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위한 경상남도의"청년 정책 참여 '경청JO人'"구성 및 운영을 제안함

❑ 현 황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2024년 2월 기준 경남의 총 인구는 324만명, 20 ~ 39세 인구는 66만명임

❍ 경남 총 인구 대비 20 ~ 39세 청년층 인구의 구성비는 20.5%이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동의 연령을 제외하면 약 24.4%로 비중이 증가

❍ 청년기본법에서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제시하고 있음

*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10분 1)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

❍ 허나 지금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주거 중심으로 창업·문화·생활·복지·마음건강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 약 3,000개나 되는 정책이 시행되는데, 매일 일일이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소모되는 물리적, 시간적 소요 비용은 매우 큼

- 2023년 하반기부터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 9개 부처를 시작으로 청년보좌역과 더불어 2030 자문단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동시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은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청년의 참여에 관한 법안이 다루어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원하는 기관에서 정부위원회, 정책평가, 정책 모니터링, 정책서포터즈, 간담회, 기자단 등 청년 DB를 통해 다양한 정책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과 정책 담당자를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 운영
- 정부의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의 구성은 2027년까지 14% 달성,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을 기준으로 연 2%씩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의 정책 시행과는 별도로 순천시에서 2023년부터 청년위원 20% 의무제를 시행 중이며, 186개의 위원회 중 2026년까지 130개 이상의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의무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음(전체 위원회 중 70%)

❑ 문 제 점

- (형식적) 우리나라 청년 정책 참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참여 및 구성되나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는 형식적인 참여로 보여주기식에 그치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의 참여 방안 모색 필요
- (경남 정책 추진 체계 부재)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초기 단계로 중앙기관 및 위원회에 의한 정책에 포커스되어 있어 경남도 및 지자체에 밀접한 경남 청년의 생각을 반영한 실효성 및 정책 수립에는 다소 제한적임
- (정보격차) 정책참여시점에서도 정보격차에 따라 참여에 국한되고 참여를 통한 의견 개진 등이 제한됨

❑ 세부추진계획

1. 경상남도 내 소속 위원회 청년위원 20% 의무제

❍ 근　　거 : 청년기본법 및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사업내용 : 경상남도 소속 237개의 위원회에 청년위원 20%의 정량적으로 인원 의무 배정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7년 12월

❍ 사업대상

- 주관 : 경상남도 소속 237개의 위원회
- 참여 :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 정책 참여에 대한 의지 및 학식, 역량을 갖춘 자

*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 경우 학식과 역량을 갖춘 검증된 이로 하며 이를 위해 청년DB에 프로필이 등재되어 선발 시 활용

❍ 소요예산 : 본 청년위원 20% 의무제 도입을 위한 별도 예산은 불필요하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의함.

❍ 추진방안

1) 사업 추진일정에 따른 점진적 청년위원 20% 의무제 도입

2) 경남청년플랫폼 및 직접 응모를 통한 청년DB 구축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2024년	상시		
경상남도 조례 반영	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모 및 응모	경남청년플랫폼을 이용해 인재DB에 등록	각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2025년	청년위원 20% 의무 배정 50개 위원회로 확대		
2026년	청년위원 20% 의무 배정 120개 위원회로 확대		
2027년	청년위원 20% 의무 배정 190개 이상 위원회로 확대(전체 위원회 80% 목표)		

2. 경남 청년보좌역 및 2030 정책 자문단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및 2030 정책 자문단 운영경과 및 현황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근거 마련(22.9.6.)
- 시범 9개 중 7개 부처 청년보좌역 합동 채용공고(22.9.13) 및 채용(11월)
- 9개 시범운영부처 2030자문단 구성완료(22.12월)
- 청년보좌역 채용방식 개선을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3.6.20)
-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24개부처로 확대계획 발표(23.8.7)
- 24개 부처 청년보좌역 확대채용('23.12말 기준 29명 활동중)
- 24개부처 2030자문단 구성 진행중(~24.2월)

- 위 자료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나 경남 청년의 생각을 반영한 실효성 및 정책 수립에는 다소 제한적임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적)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의 국정참여 확대에 부응하고, 경남 청년에게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필요성)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직접 수시로 도지사 및 지자체장에 전달할 청년보좌역 채용과 2030 자문단 구성 필요

- 기존 경청넷의 기능을 확대하여 청년의 참여를 테마 또는 영역별로 좀 더 확대하고 심도 있게 참여 필요

❍ 사업내용

- (근거) 청년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및 경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일체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의2(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임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임용하며, 임용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퇴직과 함께 면직된다.

- (내용) 경남 청년보좌역 채용 및 2030 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하여 기존 경남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 이를 활용
- 자문단 경우 기존 경청넷 보다 한가지 테마 또는 영역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청년의 정책 참여를 도모하며, 추후 경남 및 지자체, 필요시 각종 사회문제 및 이슈 발생시 TF 형태 자문단 구성 확대 운영

❍ (사업기간) 계속 사업('24년~)

❍ (사업대상)

- (주관) 경상남도, 추후 지자체 확대 적용
- (참여) 만18세부터 만39세까지 정책 참여에 대한 의지 및 학식, 역량을 갖춘 자

*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문단 경우 학식과 역량을 갖춘 검증된 이로 하며 이를 위해 청년 DB에 프로필이 등재되어 선발 시 활용

❍ (사 업 량) 경남 및 지자체 내 수요에 맞추어 청년보좌역 채용과 2030 자문단 구성 운영

❍ (예　　산)

- 청년보좌역 경우 신규 예산 편성 필요

* 50,000천원(임기제 지방전문경력관 다급 인건비 수준 단, 경력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 조정)

* 산출근거 : 현재 중앙정부기관 및 위원회에서는 임기제 전문경력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지방 전문경력관 보수 규정에 따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또는 각종 정책 입안과 관련한 기존 지자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의 TO를 증편하여 선발시 청년계층으로 함
- 자문단 경우 기 편성 예산을 활용하되 회의 등 참여시 기존 예산 활용

* 50,000천원(기존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예산 및 각종 위원회 구성 보수 근거)

❍ (사업시행)

- (추진방법) 시범운영 및 단계적으로 확대(경남 시범적용 후 시→군 순)

구 분	추 진 내 용	비고
~ '24. 12.	경남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설치·운영 계획' 발표	
~ '24. 12.	경남 및 기초 지자체 내 조례 반영	
'25. 1. ~	경남 2030 자문단 시범 운영	
~'25. 12.	차기년도 예산 편성시 보완	
'26. 1. ~	지자체별 청년보좌역 확대 운영	

❑ ETC, 기대효과

❍ 실제 정치를 경험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각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부여받을 수 있고 기존 지방정치에서도 청년에 대한 참여에 대한 의지 및 인식의 변화를 기대함

❍ 경상남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이 더 많은 참여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할당제가 필수적임

❍ 청년이 취업과 창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함

❍ 청년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의 생각이 반영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에 제안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경남 도정과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참여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를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

❍ 청년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의견을 직접 피력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모두 경남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함임**

❑ 관련 참고자료

-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법제처)
- 지자체 청년조례,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등
- 경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 ~ '25)
- 청년정책 연구기반 강화방안(한국행정연구원)
-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한눈에 보는 2024 창원시 청년정책
- 청년 DB 플랫폼(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 창원시 청년정보 플랫폼
- 온통청년(온라인 청년정책 사이트)
- 청년 정치대표성의 한계와 가능성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검증된 청년 확보를 위한 플랫폼 활용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DB

청년DB 프로필 등록 등록

제목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번호	신청상태	진행상황	제목	진행 기간
22	접수마감	심사대기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	2024-04-19 ~ 2024-05-02
21	접수마감	심사완료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모집 공고	2024-03-12 ~ 2024-03-18
20	접수마감	심사완료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 추가 공개모집 공고 ('24.2.13. ~ '24.2.23.)	2024-02-13 ~ 2024-02-23
19	접수마감	심사완료	교육부 2030 자문단 공개모집	2024-02-01 ~ 2024-02-13
18	접수마감	심사완료	국민권익위원회 「2030 자문단」 공개 모집	2024-01-10 ~ 2024-01-21
17	접수마감	심사완료	국방부 「2030 자문단」 공개 모집	2023-12-29 ~ 2024-01-10
16	접수마감	심사완료	여성가족부 2030자문단 공개모집	2023-12-08 ~ 2023-12-18
15	접수마감	심사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30 자문단 공개 모집	2023-12-07 ~ 2023-12-22
14	접수마감	심사완료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공개모집 ('23.12.4~12.11)	2023-12-04 ~ 2023-12-11
13	접수마감	심사완료	산업통상자원부 2030 자문단 공개 모집	2023-11-29 ~ 2023-12-09

* 이는 중앙정부기관 및 위원회 사례로 지자체 위원 모집 내용 부재함

창원시 청년인재 모집 및 등록안내

우리 시는 청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청년위원 할당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인재'를 모집하여 '청년인재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 상

· 전문지식 또는 전문경험, 시정 참여 의사가 있는 19~39세 청년
※ 단, 기타 농업 분야의 경우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의 49세까지를 청년연령으로 적용 (개별규정준수)

활동사항

· 창원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책 자문, 각종 서포터즈, 행사참여 등
※ 본 제도는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의견과 경험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력풀(Pool)로써 신청과 동시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아님

* 이는 창원시 청년인재 등록에 관한 내용이나 아직 초기 단계로 활성화 및 지속 확대 필요